

與,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소상공인 권익 강화 목표”

공정위·정무위 여당의원 협의회
플랫폼 중개수수료 차별 금지 추진
업계 “대형 플랫폼 과도한 규제 우려”
미국 빅테크, 온플법 차별 우려 반발
여야 합의로 논의, 패스트트랙 지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엔 공정위 측에서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무위에선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회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

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임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

역대표부(USTR)과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온플법만 제정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처리가 지연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간사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는 의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에서 온플법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강준현 간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도 “(미국과) 통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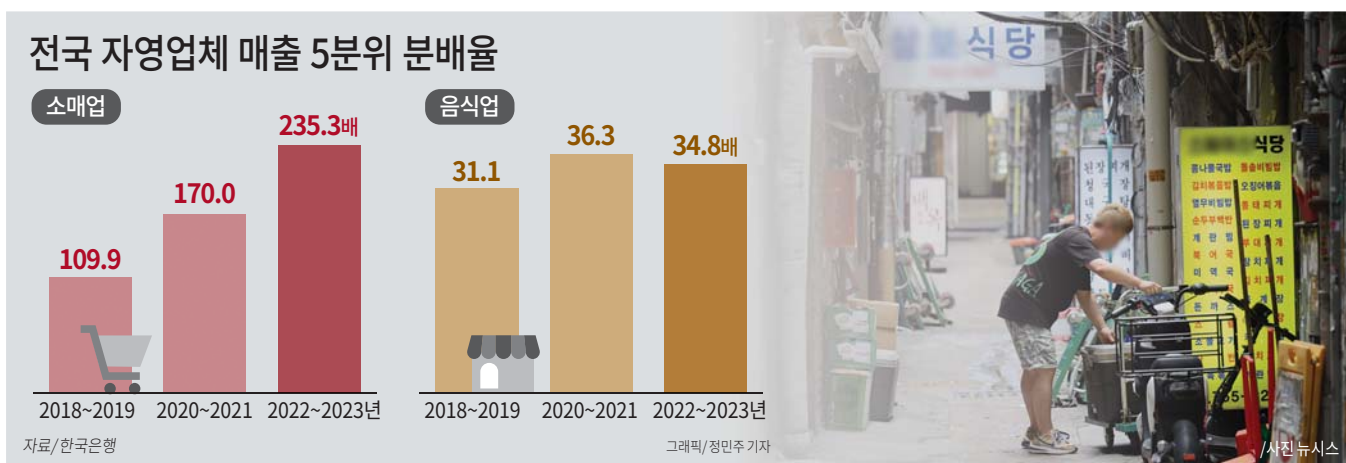
자영업자 매출 격차 벌어져… “비수도권 영세업체 더 타격”

한은, 온플법 성장 양극화 심화 보고서
소매업·음식점업 등 매출 차이 확대
비수도권, 자본 접근성 낮아 어려움 겪어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의 정민수 팀장, 정희완 과장, 강보민·안지민 조사역, 고용동향팀의 이영호 과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확대는 정보 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다.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을 보면 자영



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2019년 평균 각각 109.9배, 31.1배에서 2022~2023년 평균 235.3배, 34.8배로 올랐다.

양극화 정도는 지역과 점포형태, 규모 등에 따라 심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경우 수도권의

무점포 소매 업체는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점포 소매가 쇠퇴했다. 통신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이 대형 도매시장과 풀필먼트 센터가 집적된 수도권에 집중되며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의 소매업 고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 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줄었다. 이

중 대부분은 자영업(-6.1명) 부문에서 감소했다.

상·하위 20% 업체 간 매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통 플랫폼의 매출 성장률 격차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오를 때 매출 성장을 격차는 수도권에서 5.1%p, 비수도권에서는 7.2%p 확대됐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영세업체가 기술 적응력이 낮고, 플랫폼 이용에 따

른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으면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경우 1년 뒤 매출이 8.8% 증가하고 고용은 1.2% 늘었다. 폐업 확률은 1.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매출 개선과 폐업 방지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러나 4년간 지속 지원을 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간 지원 후 종료한 업체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개선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를 를 중심으로 재기를 돕는 실업보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력인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2008년 이후 공휴일서 제외
공휴일로 전환 논의 급부상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〇〇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테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서예진 기자 syj@

해외시장 진출 위한 CB인증 등 안전성 입증

» 1면 ‘현지생산·혁신기술’ 서 계속

에이피알은 국내 홈 뷰티 업계 최초로, 주력 제품인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전채 모델을 대상으로 ‘가정용 전자기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CB인증)’을 완료했다.

CB인증은 국제 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산하에서 운영되며 전기·전자 제품 안전성을 평가해 별도 인증을 발행하는 국제 시스템이다. 유럽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에서 상호 인정된다.

특히 CB인증은 제품 내 부품 변경, 한정판 출시 등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돼, 부스터 프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인증을 거쳤고 모두 통과했다.

에이피알 측은 “홈 뷰티 디바이스는 편리함, 효능감, 사용자 안전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혁신, 효능, 안전 등 모든 요소에 집중해 완전체 디바이스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뷰티&헬스케어 기업 네오팜은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서 K뷰티 흥행을 이어가기 위한 성과를 거뒀다.

네오팜에 따르면, 지난 8~11일(현지 시간) 아마존에서 진행된 ‘프라임 데이’ 행사에서 자사의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이 베이비 로션 부위 4위를 차지했다. 아토팜 제품 전반에서 판매 호조가 이뤄져 네오팜의 이번 프라임데이 전체 매출은 지난해 프라임데이 대비 약 153%, 일평균 매출은 지난해 대비 841% 가량 급증했다. 네오팜은 기존 스킨케어, 선크어 등에 이어 베이비 제품으로 브랜드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청하 기자 mlee236@